

## [별지 제5호 서식] 활용결과 보고서

정책연구과제명	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	연구기관/ 책임연구원	한국보건사회 연구원/김수봉
부서/과제담당관	보상정책과/과장 오진영	담당공무원	사무관 이제복
연구기간	2008. 07. 10. ~ 2008. 12. 5. ( 약 5 개월)		
활용구분	1. 법·제도 개선( )    2. 정책반영( )    3. 정책참조( ○ )		
연구목적	<p>○ 새로운 장애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등급간 보상금 격차 및 보상금 준거기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</p> <p>○ 또한, 각종 수당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이 발달한 현대에 적합한 새로운 수당체계 모색 등</p>		
연구주요내용	<p>○ 등급(장애율)별·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수준 결정</p> <p>○ 적정 보상수준에 대한 준거지표 설정</p> <p>○ 각종 수당지급제도의 합리적 개편</p> <p>○ 경상이자 등에 대한 일시 보상금제도 도입여부 검토</p>		
활용목적	<p>○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「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」 업무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</p>		
정책활용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7년 이후 적용된 보상금 준거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장애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등급간 보상수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</li> </ul> </li> <li>·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결과 보상금 지급 준거기준은 현행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 수준이 적절하며, 등급체계 변경에 따라 장애등급에 비례한 보상체계가 제시됨</li> <li>- 또한 유족보상금 지급기준도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희생도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선진국 및 유관기관의 사례를 감안 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</li> </ul> </li> <li>· 법·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,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연구용역의 제안내용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대상 및 체계개편안에 반영하여 집행여부를 검토 중임</li> </ul> </li> </ul>		